

대전아동보육공공성확대와 공공부문일자리확충을 위한 시민연대 결성 기자회견

- 일 시 : 2005년 5월 31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대전시청 기자실

◆ 기자회견 순서 ◆

- ▶ 인사 및 참석자소개
- ▶ 경과보고
- ▶ 선언문 낭독
- ▶ 사업계획 및 조직구성
- ▶ 질의응답

대전아동보육공공성확대와 공공부문일자리확충을 위한 시민연대

간사단체 : 대전 중구 선화동 184-22번지 보문평화의집1층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042-3310092)

대전 중구 중촌동 102-2번지 3층 대전여민회 (042-257-3534)

■ 경과보고

- 5/1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한 대전시민연대 결성제안」 기자회견
- 5/16 대전시민단체 및 유관단체 연대결성 제안
-대전사회복지사협회/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는사람들
대전여민회/대전지역아동센터연합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대전본부/ 전교조대전지부
- 5/25 대전지역 아동보육공공성 확대와 공공부문일자리 확충을
위한 연대 조직 결성 간담회
- 5/31 대전아동보육공공성확대와공공부문일자리확충을위한시민연대
결성 기자회견

대전아동보육공공성 확대와 공공부문일자리확충을 위한 시민연대 결성 선언문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이 가족의 품안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다. 믿고 맡길 곳 없는 육아시설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막고 있으며 값비싼 민간 시설들은 가족의 경제부담을 압박하고 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은 보습이라는 명분으로 치장하여 학원에서 보호받고 있거나 열쇠를 들고 다니며 학교를 오가는 실정이다.

가족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핵가족화와 더불어 가족의 기능은 약화되었으며, 출산율의 저하 및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도래와 여성의 사회참여 및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 우리 시대의 가족 형태는 전통적인 가족과는 판이한 변화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가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아이들은 사회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 못 하다. 또한 점점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고통조차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OECD 국가 육아비용의 정부 부담률이 일본 53.4%, 스웨덴 8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0%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저수준을 기록(2003, OECD)하고 있다. 그 결과 대전지역의 경우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은 전체 아동에 비해 33%에 지나지 않으며 정원충족율은 75%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는 보육시설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보육시설 및 민간시설을 늘리는 데만 급급하여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3%로 매우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의 열쇠아동이라 불리는 방과후 방임 아동의 수가 8,154명에 달하는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보육의 사회적 방임은 필연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가중을 가져와 취업여성의 79%가 보육비용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차상위 근로계층 가정의 재정에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나 사교육 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빈곤계층 및 저소득층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그 자녀들은 오갈 곳 없이 방치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결국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 없이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도, 저소득층의 지원과 보호도,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도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우리는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과시형 정치 전략으로 제시되고 시설위주의 정책 대안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에 발맞추어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기 위해 도입된 분권 교부세제가 국가가 감당해온 복지재정을 지방으로 전가하면서 사실상 복지지출을 감축 시키는 실정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분권과 자율을 명분으로 복지재정 지출의 부담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사실상 복지지출의 감소와 주민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전아동보육공공성확대와 공공부문일자리확충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보육공공성연대)를 결성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분권, 아이들의 공공적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시민-행정-학계-정계의 공동대안마련운동을 벌여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아동보육의 공공성 확대 정책이 적은 비용의 투자로도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는 아동의 공공적 사회적 보호와 공공부문일자리 확충을 달성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안정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보육공공성연대는 영유아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아동의 방과후 보호의 강화를 기본 정책방향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모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 모든 초등학교 방과후아동센터 설치·운영,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과후보육법 및 관련 조례제정 및 예산 확보 운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며 이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다.

2005년 5월 31일

대전아동보육공공성확대와 공공부문일자리확충을 위한 시민연대

대전사회복지사협회/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대전기독교청년회(YMCA)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는사람들/대전여민회/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연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민주노동대전본부/전교조대전지부

■ 향후 사업계획 및 조직구성

1) 2대 정책 방향 및 4대 정책과제

정책방향 I.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확대

정책과제1.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정책과제2.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

정책방향 II. 아동의 방과후 보호의 강화

정책과제3. 방과후 아동센터 설립

정책과제4. 방과후 보육법 및 조례제정

< 정책방향 1.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확대 >

1) 정책과제1.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 지역별 보육시설의 불균형 해소, 공보육의 공적 인프라로서 국공립시설 필요

(1) 세부정책 목표 및 효과

-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기준(20,595명) 50%까지 확대
- 10,000명 보육할 수 있는 시설 확충
- 125개소 × 8명 = 1,000명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2) 예산소요액

- 신축 63개소 × 1,000백만원 = 63,000백만원
- 임대 62개소 × 100백만원 = 6,200백만원

2) 정책과제2.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

(1) 세부정책 목표 및 효과

- 전국 평균 수준 78%에 맞추기 위해 33개소 신설
- 국·공립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례 개정
- 33개소 × 50명 = 1,650명 보호
- 33개소 × 4명 = 132명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2) 예산소요액

- 신축 33개소 × 100백만원 = 3,300백만원

< 정책방향Ⅱ. 아동의 방과후 보호의 강화 >

3) 정책과제3. 방과후 아동센터 설립 및 전면 실시

(1) 세부 정책 목표 및 효과

- 방과 후 전체 취학 아동, 특히 6%의 열쇠아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전 학교에 방과후 아동센터 의무 설치
- 열쇠아동 8,154명 방과후 보호
- 120개교 × 4명 = 480명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 120개교 × 24,000천원 = 2,880백만원

4) 정책과제4. 방과후 보육법 및 조례제정

(1) 세부 정책목표 및 과제

- 영유아보육법이나 아동복지법과 구별되는 방과후 아동보육법 제정 또는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장 설치

2) 주요사업계획

○ 연대조직 결성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5월 31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 대전시청 기자실

○ 대전시 보육 및 방과후 보호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회 개최

- 6월 말

○ 설문조사와 더불어 서명운동 실시

- 7월 달부터 본격 돌입

○ 설문조사를 통한 대전지역 보육실태 자료집 제작

○ 시의원 정책간담회 및 시장과 면담

○ 아동보육관련 전국 국회의원 의견조사 및 대전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 간담회

○ 법률 검토 및 의원발의(또는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 관련 시·도 조례개정(상위법 내용 검토)

- 영유아보육법이나 아동복지법과 구별되는 방과후 아동보육법을 제정 또는 아동복지법을 전면개정하여 방과후아동보육에 대한 장을 설치 운동 전개

- 지역단체들의 연대로 관련법에 대한 입법청원 전개

- 지역단위 내에서 중앙정부에서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 필요성에 대한 자료 확보(지역단위와 중앙단위에서 적절히 조화된 사업 전개)

- 방과후 보육조례에 대한 설치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의 조례안을 도출

- 아동의 사회적 보호, 즉 아동의 교육이나 보육이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법률의 개정 문제도 고려함

3) 조직구성

(1). 조직 명 칭 : 대전아동보육공공성확대와 공공부문일자리확충을 위한 시민연대

(2) 참여단체 현황

○ 총 17개 단체 참여

○ 참여 단체

▪ 대전사회복지사협회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대전기독교청년회(YMCA)/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는 사람들

대전여민회/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홍사단/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 민주노총대전본부

▪ 전교조대전지부

(3) 조직의 구성

○ 공동대표 : 대전사회복지사협회 정맹진 회장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는 사람들 권술룡 대표

대전여민회 정이순진 회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송인준 상임의장

민주노총대전본부

전교조대전지부 성광진 지부장

○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집행위원 : 반수용 (대전사회복지사협회)
이승미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는 사람들)
김최진연 (대전여민회)
박종갑 (민주노총대전본부)
송경옥 (전교조대전지부)

○ 감사단체 : 대전여민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아동보육공공성확대와 공공부문일자리확충을위한 시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백경원 042-331-0092, 010-6406-7949)

제 목 대전아동보육공공성확대와공공부문일자리확충을위한시민연대 결성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대전아동보육공공성확대와 공공부문일자리확충을위한 시민연대 결성 기자회견 개최

- 아동의 사회적 보호(19,804명)와 공공부문일자리확충(1,612) 가져올것...

1.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전아동보육공공성확대와공공부문일자리확충을위한 시민연대(이하 ‘대전보육공공성연대’)』가 오늘(31일) 오후2시,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 대전보육공공성연대는 앞으로 영유아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아동의 방과후 보호의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의무 설치화, ▶방과후 아동센터의 전면 실시, ▶방과후 보육법 및 조례제정을 위한 운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추구하고, 아울러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3.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OECD 국가 육아비용의 정부 부담률이 일본 53.4%, 스웨덴 8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0%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대전지역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이 3%로 매우 저조한 비율을 자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보육시설 및 민간시설을 늘리는데만 급급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4. 이에 이들은 “구체적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보육이용 아동 수 기준으로 50%까지 확대(1만명)하기 위해 125개소의 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병설유치원설치비율을 전국 평균 수준인 78%까지 확대하기 위해 33개를 새롭게 증설하는 것은 물론, 대전지역 열쇠아동 6%인 8,154명을 보호 하기위해 초등학교 120여 곳에 방과후아동센터를 전면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5. 이들은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공보육시설이 확대될 경우 열쇠아동을 비롯한 19,804 명의 아동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1,612명의 공공부문일자리가 확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대전보육공공성연대는 앞으로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개최는 물론, 예산확보운동, 조례제정운동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범시민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본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주요문의는 백경원 간사(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

대전아동보육공공성확대와공공부문일자리확충을위한시민연대

대전사회복지사협회/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대전기독교청년회(YMCA)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는사람들/대전여민회/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민주노동대전본부/전교조대전지부